

창간사 / 김중용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장 2

창간축사 / 조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4

/ 김창순 북한연구소 이사장 6

시사특집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대책과 기업의 대응

-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 조명균 통일원 협력과장 8
- 남북경협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 장항석 공성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장 16
- 북한 진출 기업 지원대책과 기업의 대응 / 박양우 동상산업부 무역협력과장 22

연구논단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전망 / 남궁영 민족통일연구원 28
-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 현황과 과제 /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48
- 남북경협 관련 북한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 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58

창간기념 포럼 | 통일정책과 남북경협 83

- 사회 / 신창민 · 주제발표 / 김용호
- 토론 / 김영일, 백학순, 이성춘, 이영선, 이용환

이달의 초점

접촉은 많이, 투자는 신중하게 / 도준호 조선일보 부국장대우 북한부장 113

통일다리

프롤로그: 민족이질화 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 김경용 통일원 118

통일경제노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통일경제센터 121

統一經濟

발간에 즈음하여

통일을 향해 솟구치는 기운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과 북미간 핵협상 타결을 배경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 자세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 관련 업무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남북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의 냉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포용적인 대응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지금의 북한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현상 유지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이라는 두개의 상반된 목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개혁과 현상 유지'라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건 조성이 결국 점진적이고 안정된 남북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희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월간 「통일경제」를 발간하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첫째, 남북 경협을 본격화할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이론과 현실을



김중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연계시키는 중개자 역할로 실천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며, 셋째,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한 북한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끝으로 국민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등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올바른 국민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경제센터를 발족시켰습니다. 저희는 국민 경제의 선진화와 남북 경협이 순조로운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통일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성원과 질책을 바랍니다. 나아가서 「통일경제」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있는 분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창간 축사



조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지난 해,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핵문제에 관한 북미간의 협상타결이라 할 수 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각색하듯, 김일성이 극적으로 사망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관계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삼전사건(三轉四轉), 통일이 지향하는 민족의 행보는 아직도 더디고 무겁다.

이 나라는 끝내,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게 되었다. 전세계에서 이데올로기 대립의 냉전은 사라졌으나, 이 땅에서는 아직 냉전 기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온 국민이 통일을 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실한 비전은 아직 서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통일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마치 동독이 붕괴하여 서독이 이를 흡수했듯이, 우리나라의 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리라는 시각이 이 견해에 무게를 실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정을 냉정히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는 사실보다도, 그 '흡수'를 가능하게 한 이면에는 동서독 양측의 주민들 사이에 이해와 신뢰의 교감이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동독주민들은 서독의 정치와 경제의 체제를 잘 이해함으로써, 그들도 서독과 같은 체제를 채택하면,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자진하여 동독체제를 버리고 서독체제를 따르기를 선택했다. 서독의 주민들도 동독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합쳐도, 단시일내에 그들을 동화하고 같은 국민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그들에 대해 관용과 아량을 베풀 용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양측 주민의 선택이 합쳐서 통일이라는 대업이 소프트 랜딩(soft landing)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통일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분단국가의 평화통일의 필요조건은 양측의 주민들 정부가 아님 이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소프트 랜딩 형식의 통일은 불가능하고 설사 통일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하드 랜딩(hard landing)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서로의 이해가 결여된 채 이루어지는 하드 랜딩 형식의 통일이 어떤 코스트를 수반하는가는 상상하기조차도 엄청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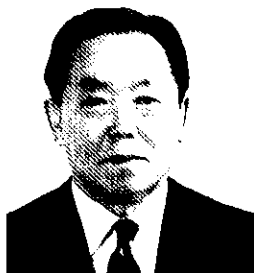
현재 남북한 관계의 건전한 전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쌍방간의 불신이며 그 불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쌍방간의 이해의 부족이다. 독일의 격언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해가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서로의 관용이 있을 수 있다. 이해와 관용이 없는 사람들의 통일에는 비극이 있을 뿐이다.

불행히도, 현재 남북한의 주민들은 서로의 사정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다. 남한에 사는 우리는 대부분 이쪽의 기준을 가지고 북한을 평가하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동포들은 대부분 그쪽의 잣대로 사태를 인식하기 때문에, 세계의 풍향에 대한 인식은 아주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의 사정에 대한 이와 같은 부지의 상태가 지속하는 한, 정상적인 관계의 성립은 어렵다.

그래,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북한과 성체협력의 길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북한에 진입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기업차원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지식은 아주 제한되어 있으리라 짐작된다. 만일 그렇다면 이로 말미암은 갖가지 시행착오가 앞으로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우리국민과 기업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월간 「통일경제」를 창간하게 된것은 매우 시의를 얻은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최근 북한사정 및 남북교류협력의 문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통일경제센터」를 발족시킨 바 있거니와, 이번에 그 첫번째 사업으로 북한경제 및 남북교류협력의 전문지로 「통일경제」를 내기로 한것이다. 시대의 첨단을 걷는 우수한 연구진과 참신한 작상을 가진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이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을 확신하며, 「통일경제」가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창간 축사



김창순
북한연구소 이사장

북한의 정치이론에도 하나의 민족일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곧 민족 성원이 일상적으로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가져야 민족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대로 한다면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을 민족되게 하는 징표를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 관계의 증진은 상실된 민족징표를 회복하기 위한 민족 최대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분단 반세기를 맞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민족을 민족되게 하는 징표부터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하나의 민족일 수 있기 위해서는 문화 공동체이어야 하고 영토공동체이어야 하지만, 잃어 버린 그 모든 조건을 단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다. 가능한 조건부터 하나씩 찾아서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북한도 자신의 정치이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또는 민족 통일을 주장하는 명분론을 철회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러다가 남한에 정치적으로 흡수될 지도 모른다는 기우 때문에 구차스럽게 정치적 장벽을 치고 있는 터이다. 그렇지만 경제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논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이해에 도달하게 되면, 부리한 정치 제일주의적 장벽 조치는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적절하게도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북한 경제 및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통일경제센터를 발족시키고, 새해 1월부터 북한 경제 및 남북경협에 관한 전문지인 월간 「통일경제」를 발간케 될 것을 쌍수를 들어 뜨겁게 환영하는 바이다.